

행정학개론

<<총평>>

2018년 국가직 9급 행정학 시험은 무난한 난이도로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8번 행정기관, 14번 성인지 예산, 17번 지방의회, 19번 전문경력관 문제는 다소 생소한 문제로 느껴질 수 있을 듯 합니다. 또한 많은 보기들이 기존의 기출지문을 그대로 옮기기 보다는 새로운 표현으로 변형해서 출제되고 있고, 가능하면 그동안 출제되지 않던 부분을 찾아 출제하려는 것이 최근의 기출 흐름입니다.

이에 기존의 A~C급으로 분류되던 문제 중 어디가 최근에 출제되지 않았는지 살피는 것도 중요 전략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4번 근무성적평정상의 오류, 5번 롤스, 6번 살라몬의 정책수단, 9번 징계, 10번 정부회계, 15번 킹던의 정책의 창, 15번 결산 등은 특 A급으로 분류되던 문제입니다.

2018년 국가직 9급 행정학 시험은 기존의 기출문제를 통해 전반적으로 무난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9급 행정학 문제는 기출문제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기존의 문장을 그대로 출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련된 기출지문을 상호 비교하는 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세훈 교수의 「문제로 정리하는 기본서 - 153행정학」을 통해 기출지문 간의 비교 분석을 해나가기를 추천합니다.

총론	4	정책론	3
조직론	4	인사행정론	4
재무행정론	4	환류론·정보화	-
지방자치론	1		

문 1. 상황적응적 접근방법(contingency approach)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체제이론의 거시적 관점에 따라 모든 상황에 적합한 유일 최선의 관리방법을 모색한다.
- ② 체제이론에서와 같이 조직은 일정한 경계를 가지고 환경과 구분되는 체제의 하나로 본다.
- ③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법의 효율성은 그것이 처한 상황에 의존한다고 가정한다.
- ④ 연구대상이 될 변수를 한정하고 복잡한 상황적 조건들을 유형화함으로써 거대이론보다 분석의 틀을 단순화한다.

[정답] ①

[해설]

- ① × : 상황적응적 접근방법은 말 그대로 상황에 맞추어 적응해 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모든 상황에 적합한 유일 최선의 관리방법은 없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다.
- ② ○ : 체제이론은 개방체제적 접근으로 투입 → 전환 → 산출 → 환류의 과정 속에서 체제 내부와 체제 외부의 환경이 상호 작용을 하게 된다.

문 2. 신공공관리론(NPM)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다르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관리 기법을 공공부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 ② 민주적 책임성과 기업가적 재량권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정부관료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렵다.
- ③ 고객 중심 논리는 국민을 관료주도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의존하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 ④ 정치적 논리를 우선하여 내부관리적 효율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정답] ④

[해설]

- ④ × : 신공공관리론은 신관리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경제적 논리를 우선하여 내부관리적 효율성을 중시한다.
- ② ○ : 신공공관리론은 기업가적 논리에 따라 비용부담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는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민주적 책임성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 그 결과 민주적 책임성과 기업가적 재량권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신공공관리론의 정부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정부관료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려울 수 있다.

문 3.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요 변수가 시스템에 의하여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는 적응적 의사결정을 강조한다.
- ②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와 대안의 광범위한 탐색을 강조한다.
- ③ 자동온도조절장치와 같이 사전에 프로그램된 메커니즘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 ④ 한정된 범위의 변수에만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통제하려는 모형이다.

[정답] ②

[해설]

- ② × :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목표를 고민하지 않는 '무목적적 적응'에 의한 의사결정을 설명한다.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와 대안의 광범위한 탐색을 강조하는 것은 합리모형에 가깝다.

문 4. 근무성적평정상의 오류 중 평가자가 일관성 있는 평정기준을 갖지 못하여 관대화 및 엄격화 경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은?

- ① 연쇄 효과(halo effect)
- ② 규칙적 오류(systematic error)
- ③ 집중화 경향(central tendency)
- ④ 총계적 오류(total error)

[정답] ④

[해설]

- ④ ○ : 총계적 오류(total error)란 동일한 피평정자에 대해 경우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는 즉 일관성이 없는 불규칙적인 오류로서 실제평점과 평균치 간의 차이의 총계를 의미한다. 평정자의 평정기준이 일정하지 않아 관대화 경향과 엄격화 경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오류이다.

문 5. 롤스(J. Rawls)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초적 자연상태(state of nature) 하에서 구성원들의 이성적 판단에 따른 사회형태는 극히 합리적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사회계약론적 전통에 따른다.
- ② 현저한 불평등 위에서는 사회의 총체적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공리주의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 ③ 사회의 모든 가치는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불평등한 배분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수혜자에게도 유리한 경우에 정당하다고 본다.
- ④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보다는 자유방임주의에 의거한 전통적 자유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답] ④

[해설]

- ④ × : 롤스는 자유주의자이기에 정의의 제1원리로 '기본적 자유의 평등'을 제시한다. 하지만 제2원리 중 하나로 '차등조정 원리(Maximin, 최소극대화 원칙, 최대최소 원칙)'를 제시하여 평등의 원칙을 제시하여 자유주의자로부터 자유주의자가 아니라는 비판을 받는다. 즉 회색분자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에 자유방임주의에 의거한 전통적 자유주의 입장을 취하기 보다는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을 취한다.
- ② ○ : 차등조정의 원리를 주장하며, 현저한 불평등 위에서는 사회의 총체적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공리주의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문 6. 살라몬(L. M. Salamon)이 제시한 정책수단의 유형에서 직접적 수단으로만 묶은 것은?

- ㄱ. 조세지출(tax expenditure)
 ㄴ. 경제적 규제(economic regulation)
 ㄷ. 정부소비(direct government)
 ㄹ. 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n)
 ㅁ. 공기업(government corporation)
 ㅂ. 보조금(grant)

-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ㅂ
 ③ ㄴ, ㄷ, ㅁ
 ④ ㄹ, ㅁ, ㅂ

[정답] ③

[해설]

③ ○ : ㄴ(경제적 규제), ㄷ(정부소비), ㅁ(공기업), 직접대부, 공공정보 제공 등이 직접적 수단이다.

직접성	정책수단
간접수단	사회적 규제, 계약, 보조금, 지급보증(대출보증), 보험, 조세지출, 사용자, 과징금, 손해책임법, 바우처
직접수단	정부소비(직접시행), 경제규제, 직접대부, 공기업, 공공정보 제공

문 7. 립스키(M. Lipsky)의 일선관료제(Street-Level Bureaucracy)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일선관료는 고객에 대한 고정관념(stereotype)을 타과함으로써 복잡한 문제와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한다.
 ② 일선관료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고객들의 목표기대는 서로 일치하고 명확하다.
 ③ 일선관료는 집행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 경우 대체로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④ 일선관료는 계층제의 하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직무의 자율성이 거의 없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가 좁다.

[정답] ③

[해설]

③ ○ : 일선관료는 집행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 경우 행정의 단순화·정형화를 통해 대체로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 ① × : 일선관료는 고객에 대한 고정관념을 통해 고객선별 및 범주화를 하고, 다양한 요구와 불확실성에 대처하려 한다.
 ② × : 일선관료에 대한 고객들의 기대는 복잡하고 다양하다.
 ④ × : 일선관료는 직무의 자율성이 높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가 넓다.

문 8.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부속기관이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② 보조기관이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③ 하부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은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이 아니다.

[정답] ①

[해설]

- ① ○ : "부속기관"이라 함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교육기관, 연구기관과 같은 행정기관을 말한다.
 ② × : '보좌기관'에 대한 설명이다.
 ③ × : '소속기관'에 대한 설명이다.
 ④ × :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은 행정위원회로 행정기관에 해당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더라도 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제외한다.
 2.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함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3. "부속기관"이라 함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4. "자문기관"이라 함은 부속기관중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행정기관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협의하는 등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5. "소속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
 6. "보조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7. "보좌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문 9.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④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 ③ ○ :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① × :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감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 :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④ × :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1항에 따르면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부터는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기출○×

-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급품 및 향응 수수, 공급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1/2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1/4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잃는 것으로 5년간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가 된다. (×) → 3년간
- 감등은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 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전액삭감)
- 정직은 중징계 처분의 하나로 정직의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이며 정직 기간 중에는 보수의 2/3를 감한다. (×) (전액삭감)
-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을 감한다. (○)

문 10. 정부회계의 기장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식부기는 발생주의 회계와, 복식부기는 현금주의 회계와 서로 밀접한 연계성을 갖는다.
- ② 단식부기는 현금의 수지와 같이 단일 항목의 증감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방식이다.
- ③ 복식부기에서는 계정 과목 간에 유기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상호 검증을 통한 부정이나 오류의 발견이 쉽다.
- ④ 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를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정답] ①

[해설]

- ① × : 단식부기는 현금주의 회계와, 복식부기는 발생주의 회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③ ○ : 복식부기는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 차변과 대변에 하나의 거래를 동시에 기록하게 되어, 계정 과목 간에 유기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상호 검증을 통한 부정이나 오류의 발견이 쉽다.

문 11. 예산과 재정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의 예산은 행정부가 제출하고 국회가 심의·확정하지만, 미국과 같은 세출예산법률의 형식은 아니다.
- ② 조세는 현 세대의 의사결정에 대한 재정 부담을 미래 세대로 전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 ③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품목별 예산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 ④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신축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서, 최소 1회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정답] ④

[해설]

- ④ × : 추가경정예산은 편성사유에만 해당하면 횟수의 제한이 없이 편성할 수 있다. 그 결과 편성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1회도 편성되지 않을 수 있다.
 ① ○ : 우리나라 예산안은 법률주의가 아닌 예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문 12. 킹던(J. Kingdon)의 '정책의 창(policy windows)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마치(J. G. March)와 올슨(J. P. Olsen)이 제시한 쓰레기통 모형을 발전시킨 것이다.
- ② 문제 흐름(problem stream), 이슈 흐름(issue stream), 정치 흐름(political stream)이 만날 때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본다.
- ③ '정책의 창'은 국회의 예산주기, 정기회기 개회 등의 규칙적인 경우뿐 아니라, 때로는 우연한 사건에 의해 열리기도 한다.
- ④ 문제에 대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정책의 창'이 닫힐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 ② × : 문제 흐름(problem stream), **정책 흐름(policy stream)**, 정치 흐름(political stream)이 만날 때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본다.
 ③ ○ : '정책의 창'은 국회의 예산주기, 정기회기 개회 등의 규칙적인 경우뿐 아니라, 때로는 우연한 사건에 의해 열리기도 한다. 즉, 문제 흐름(problem stream), 정책 흐름(policy stream), 정치 흐름(political stream)이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다가 우연히 만날 때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본다.

문 13. 조직구조의 설계에 있어서 '조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직적 연결은 상위계층의 관리자가 하위계층의 관리자를 통제하고 하위계층 간 활동을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수직적 연결방법으로는 임시적으로 조직 내의 인적·물적 자원을 결합하는 프로젝트 팀(project team)의 설치 등이 있다.
- ③ 수평적 연결은 동일한 계층의 부서 간 조정과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 ④ 수평적 연결방법으로는 다수 부서 간의 긴밀한 연결과 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ask force)의 설치 등이 있다.

[정답] ②

[해설]

- ② × : 프로젝트 팀(project team)은 수평적 연결방법이다.

문 14.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작성한다.
- ③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 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②

[해설]

- ② × :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9조(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법 제26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의 규모
- 2의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

문 15. 우리나라의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 ② 정부는 감사원의 감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결산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승인으로 종료된다.
-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소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중앙관서결산보고서에 통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③ × :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고, 감사원의 결산확인 후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 결산 승인으로 종료된다.

④ ○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73조(기금결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중앙관서결산보고서에 통합하여 작성한 후 제58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 16. 공무원 부패의 사례와 그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ㄱ. 무허가 업소를 단속하던 공무원이 정상적인 단속활동을 수행하다가 금품을 제공하는 특정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
- ㄴ.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동요나 기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기가 전혀 없다고 관련 공무원이 거짓말을 한다.
- ㄷ.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대부분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인으로부터 의례적으로 ‘급행료’를 받는다.
- ㄹ. 거래당사자 없이 공금 횡령, 개인적 이익 편취, 회계 부정 등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한다.

- | ㄱ | ㄴ | ㄷ | ㄹ |
|-----------|--------|---------|---------|
| ① 제도화된 부패 | 회색 부패 | 일탈형 부패 | 생계형 부패 |
| ② 일탈형 부패 | 생계형 부패 | 조직 부패 | 회색 부패 |
| ③ 일탈형 부패 | 백색 부패 | 제도화된 부패 | 비거래형 부패 |
| ④ 조직 부패 | 백색 부패 | 생계형 부패 | 비거래형 부패 |

[정답] ③

[해설]

③ ○ : ㄱ(일탈형 부패), ㄴ(백색부패), ㄷ(제도화된 부패), ㄹ(비거래형 부패 혹은 사기형 부패)에 해당한다.

문 17.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종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한다.
- ②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 ③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지 못하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④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정답] ③

[해설]

③ × : 지방의회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다만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법」

제64조(의결정족수)

②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 :

「지방자치법」

제77조(의원의 사직)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④ ○ :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법」

제68조(일사부재의의 원칙)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문 18. 프렌치(J. R. P. French, Jr.)와 레이븐(B. H. Raven)의 권력유형 분류에서 권력의 원천이 아닌 것은?

- ① 준거(reference) ② 전문성(expertness)
- ③ 강제력(coercion) ④ 상징(symbol)

[정답] ④

[해설]

④ × : 프렌치(J. R. P. French, Jr.)와 레이븐(B. H. Raven)의 권력유형은 준거적 권력, 전문적 권력, 강제적 권력, 보상적 권력, 합법적 권력으로 분류된다. 상징적 권력은 해당되지 않는다.

문 19. 전문경력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일반직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한다.
- ③ 전문경력관직위의 군은 직무의 특성·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구분한다.
- ④ 임용권자는 일정한 경우에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② × : 전문경력관이란 계급 구분과 직군·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재직이 필요한 특수직위에 지정된다.

① ○ : 전문경력관은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대체불가능한 특수업무 등에 장기간 동일업무를 수행하도록 임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경력관 규정」

제3조(전문경력관직위 지정) ①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 :

「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직위군 구분) ① 제3조에 따른 전문경력관직위의 군은 직무의 특성·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한다.

④ ○ :

「전문경력관 규정」

제17조(전직)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키거나 다른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1. 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職)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7조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을 갖춘 경우(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전문경력관으로 전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문 20.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공급체계 및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의 직접적 공급이 아닌 대안적 서비스 공급체계(ASD: Alternative Service Delivery)는 생활쓰레기 수거, 사회복지사업 운영, 시설 관리 등의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 ② 과잉생산과 독점 등이 야기한 공공부문 비효율의 해결책으로 계약방식을 통한 서비스 공급이 도입되고 있다.
 - ③ 사용자부담 방식의 활용은 재정부담의 공평성 제고에 기여한다.
 - ④ 사바스(E. Savas)가 제시한 공공서비스 공급유형론에 따르면, 자원봉사(voluntary service)방식은 민간이 결정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유형에 속한다.

[정답] ④

[해설]

④ × : 자원봉사(voluntary service)방식은 민간이 결정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유형에 속한다.

		공급(provide)	
		정부	민간
생산 (produce)	정부	정부서비스(직접공급), 정부간 협약	정부판매(정부유참방식)
	민간	보조금(grant) 독점허가(franchising), 민간계약(위탁)	구매권(voucher) 자조활동 자원봉사